



민주주의 '불복'하고 유리지갑 터는 박근혜

촛불과 노동자 요구·투쟁 결합으로 맞서자

역시 구제불능이다. 촛불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은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이었다. 김기춘은 원조 공안검사로서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부정선거와 정치공작에 도가 튼 자이다. 한홍구 교수의 지적처럼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늙은 군장성과 공안검사 출신들을 앞세우는 박근혜 '어버이연합' 스타일은 이로써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취임 다섯 달 만에 이토록 노골적인 반동적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은, 박근혜의 자신감이 아니라 위기감을 짐작케 한다.

박근혜에 대한 위협은 지금도 거리에서 촛불로 타고르고 있다. 6월 말에 3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이 한 달 만에 매주 수만 명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경찰 수사관들이 "노다지다, 노다지" 하고 감탄할 정도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열심히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경찰은 "[언론에]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난다" 하며 이 범죄를 황급히 덮어버렸

다. 뒤늦게 이 추악한 범죄의 일부가 드러나면서 촛불에 불이 붙었다. 그러자 박근혜 정권은 촛불을 끄기 위한 물타기를 시작했다. 핵심 물줄기는 'NLL 대화록 공개'였다.

동시에 박근혜 정권은 범죄를 은폐하려고 노력했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는 은폐와 물타기를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 갔다. 박근혜 대변인실이 된 주류 언론은 이런 물타기와 은폐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정권의 온갖 노력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촛불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지금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은 단지 촛불을 든 수만 명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48퍼센트만도 아니다.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의구심이 자라고 있다.

이런 압력이 마치 선생에게 귀를 잡힌 학생처럼 새누리당에게 질질 끌려다

니던 민주당도 장외로 나오게 만들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를 수습할 카드가 거의 없다. 박근혜 정권이 한 발도 물러서기 힘든 이유는 국정원 게이트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

'1퍼센트' 지배자들은 우파 정권을 연장해 경제 위기 고통전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했다. 우파가 뿔뿔 뿜쳐서 불법과 부정까지 불사하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발 물러서면 저들이 펼치려는 반동적 정책들도 그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모든 총체적 범죄의 꼭대기에 박근혜가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채찍질

더구나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위기가 박근혜 정권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하며 재벌 퍼주기에서 나서도록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박근혜는 공작정치와 공안 탄압에 능숙한 김기춘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돌파

하려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대선에 불복한다는 거냐' 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가하는 위로부터 압력과 아래로부터 대중의 압력에 속에 오락가락하던 민주당은 일단 살아남으려고 거리로 나선 상황이다.

물론 민주당은 믿기 힘든 세력이다. 2008년 촛불 때도, 한미FTA 투쟁 때도 민주당은 제일 먼저 거리를 떠나며 우리의 뒤통수를 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아래로부터 투쟁과 '거리의 정치'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운동의 잠재력을 국정조사로 한정하며 박근혜가 시간을 벌게 해서 안 된다.

조금이나마 진실이 밝혀지게 만든 힘도, 민주당까지 거리로 나오게 한 힘도, 뿔뿔 뿜쳤던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간에 틈이 벌어지게 만든 힘도 거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반동적 정책에 대한 분노를 거리로 끌어내자.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거리의 촛불과 결합시키자.

쟁점을 확대하고 노동자가 앞장서자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자들의 ‘버릇’을 고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고 박근혜에게 주문했다. “눈으로 레이저를 쏘지 말고 온 몸으로 레이저를 쏟아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바람대로 박근혜는 지금 철도 민영화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 먹튀도 모자라 노동자 증세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며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했고, 최근에는 약속한 것을 뒤집으며 학교비정규직노조, 공무원노조를 우롱했다. 그러면 서 첨단 무기 수입 등으로 국방비는 수십조 증액하려 한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민주주의 유린 범죄를 심판하려면, 운동의 쟁점을 확대해 더



노동자는 짓밟고, 자본가는 등에 업고 퍼주는 정권 경제부총리 현오석의 '아부바' 쇼.

많은 반(反)박근혜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미 철도노조, 쌍용차 해고자들, 공무원노조의 투쟁 발언은 촛불집회에서 아낌

없는 호응과 지지를 받아 왔다. 따라서 지금, 쟁점을 확대하는 것은 운동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운동의 잠재력을 깎아먹는 것이다. 쟁점 확대는 촛불과 조직 노동자 투쟁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 하고 한 바 있다. 조직 노동자 운동이 탄압의 표적일 뿐 아니라 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 준다.

그 점에서 철도노조가 촛불집회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을 받으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모범적이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촛불집회 적극 참가를 선언한 것도 매우 반갑다.

우리는 거리의 운동과 작업장의 노동자 투쟁을 연결하며 박근혜를 더욱 압박해 나가야 한다.

‘국정원 게이트’ 범죄의 재구성

1퍼센트 계급 지배를 위한 총체적 정치공작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인데 잠이 와요?” 하던 대화가 “[증거 문서는] 다 잡아 버려요” 하는 대화로 하루 만에 바뀌었다. 서울 경찰청장 김용판이 축소·은폐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 저녁 박근혜는 대선 TV토론에서 “댓글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 하고 ‘예언’하며 문재인을 쓰아 붙였다. 한 시간 뒤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49:51 싸움’이라던 지난 대선에서 저들은 총체적인 정치 공작으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져 보면, 이 총체적 정치 공작은 2008년 촛불항쟁과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지배자들의 위기의식에서 비롯했다.

이명박은 2008년 1백만 촛불에 밀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부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정치공작에 매달린 것이다. 이것을 계속 이어갈 ‘이명박 2기 정부’ 창출도 핵심 목표였다.

위기감

고문과 조작으로 악명높은 국정원이 저들이 채택한 무기였다. 그래서 2008년 촛불 때 행안부 장관으로 경찰을 지휘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종북’은 정권과 그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암호명이었다.

원세훈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을 상대로 ‘대북심리전’을 전개했다.

틈날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종북몰이와 우파 결집에 활용하는 것도 저들의 ‘비상계획’이었다.

이 총체적 정치공작은 단지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문제를 넘어서는 ‘계급 지배’의 문제이기도 했다. 폭로된 원세훈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쌍용차 진압, 각종 집회 참가자 검거, 전교조 탄압 등이 모두 저들의 합작품이라는 게 밝혀졌다.

KEC 등에서 노조 와해 공작으로 악명 높은 창조건설팀이 그 때마다 국정원, 경찰 등과 공조한 증거도 드러났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1퍼센트 계급지배를 위해 악랄한 공작을 벌인 범죄 집단이다.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은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심지어 “상속증여세는 …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이라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왔고, 근로소득은 줄어 왔다.

이번 세제 개악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걷어 가려는 돈은 총 1조 3천억 원 가량 된다. 연봉이 3천4백50만 원을 넘는 노동자 4백34만 명(전체 노동자의 28퍼센트)이 1년에 16만 원에서 1백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은 “이 정도는 …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염장을 질렀다.

‘증세 없이 복지한다’던 박근혜의 약속은 결국 ‘복지 먹튀, 노동자 증세, 재벌 퍼주기’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이나 세금이 털 건졌는데, 정부는 7월에 총 6조 원이 넘는 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한국 돈이 9백조 원이 넘는다. 국세청이 뇌물 받고 깎아준 재벌 세금도 어마어마하다. 노동자들이 뭉쳐서 이런 돈으로 복지를 늘리라고 싸워야 한다.



노동자와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진실과 정의, 민중의 삶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2만 명이 넘게 모인 촛불 집회를 보도조차 안 했습니다. ‘장마철에 걸레를 삶아서 싸야’ 한다는 뉴스를 메인으로 내보냅니다.

가식적 중립을 거부하고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 (레프트21)은 우리 사회 99퍼센트의 눈과 귀와 입이 되고자 합니다.

박근혜 시대, 기업 광고나 정부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 좌파 언론 (레프트21)은 민주주의와 진보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http://www.left21.com>

〈레프트21〉 109호 주요기사

철도 민영화 강행 추진과 저지 투쟁

후쿠시마와 세습 생선 달하지 않은 지옥문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의 투쟁과 연대

이집트 혁명 민중의 성장과 조직의 필요

다시 듣는 맑시즘2013 아나키즘과 자율주의